

민주 “국민의힘, 이적 망언·친일터널 사과하라”

최인호 “한일해저터널, 가덕도 신공항 반하는 주장으로 시민 현혹”
김태년 “국민의힘 ‘프레임 씌우기’ 내부 문건, 보수 미래 암담”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북한 원전건설 추진의혹’과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망국적 선동은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북한에 전달했다는 USB는 미국에도 전달됐다. 제1야당 대표가 거짓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를 했다는 발언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기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삶과 미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만의 단일화 정치공학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울과 부산 시민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구태경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 경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해저터널은 친일적 주장이기도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에 반하는 주장이기도 하다”라면서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을 현혹한 것을 사과하고 공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광재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누구를 위한 터널인가’로 박재호 의원 등과 공동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해저터널 발언은 ‘1+1’이 아닌 ‘1-1’이다. 부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서 “진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성토했다.

부산시장 후보경선에 나선 김영춘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해저터널은 막 던지는 공약이다. 일본은 큰 이익을 보고, 부산은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저터널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그분들도 부산 입장에서 고품이 따져본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그때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며 역공에 주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든 ‘국회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 문건에 적힌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표현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비난이 쇄도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회를 진흙탕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충격적 지침”이라면서 “김종인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날 연 대표, 홍영표 재정분권특별위원장 등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의 원전 발언, 오세훈 후보의 V발언 등 극우세력 카톡방이나 떠들썩한 가짜뉴스를 공당 지도자가 당당히 말하는 걸 보면 보수정치 미래가 암담하다고

고집했다. 송영길 의원은 SNS에서 “수준 이하라서 놀랐”이라며 “친북, 빨갱이, 용공, 종북좌파 덮어씌우기로 장

기집권한 보수정당의 맥을 이었다”고 비꼬았고, 우원식 의원은 “성폭행 프레임이 가당키나 한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박영선 33.4% vs 안철수 27.1% vs 나경원 25.4%

알앤씨 여론조사...서울시장 보선 3자 대결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나서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모두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알앤씨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1일까지 서울 18세 이상 서울시민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 대표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면 각각 39.7%, 33.5%로 안 대표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후보 간 격차는 6.2%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4%p) 이내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맞대결하면

35.0%대 31.0%로 승리했다. 오세훈 후보와 맞붙어도 35.8%로 오 후보(27.1%)를 이겼다.

민주당에서 우상호 후보가 나서면 28.1%로 안 대표(41.5%)에게 크게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후보는 나 후보와 맞대결에서도 8.1%포인트, 오 후보에 5.9%포인트 차로 뒤졌다.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장 선거가 3자대결로 진행될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야권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안철수-나경원 3자 대결시 박 후보 33.4%, 안 대표 27.1%, 나 후보 25.4% 그리고 박영선-안철수-오세

훈 3자대결시 박 후보 33.7%, 안 대표 27.0%, 오 후보 21.7%로 각각 집계됐다.

우상호-안철수-나경원 3자대결에선 우 후보(30.4%)가 안 대표(28.5%), 나 후보(25.5%)를 눌렀다. 우상호-안철수-오세훈 3자대결에서도 우 후보가 31.3%로, 안 대표(28.6%)와 오 후보(21.5%)를 꺾었다.

범야권 단일후보 적합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안 대표가 31.7%로 나 후보(16.8%), 오 후보(12.0%)를 크게 앞섰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27.3%의 지지를 받아 13.3%를 얻은 우 후보를 가볍게 따돌렸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2.2%로 민주당(31.0%)과 별 차이가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전국 대도시 50만호 공급 대책 나오나

당정 오늘 부동산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변창욱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 장관은 회의 직후 대규모 공급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에서만 최대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호를 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

배적이다.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역세권·준공급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 방식이 거론된다.

당정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재개발 등에 한해 주민동의 비율과 같은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물량 확대와 공공성 강화가 대책 포인트”라면서 “투기 수요는 철저히 억제해 되 가구변화에 따른 실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 4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은 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법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영업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손실을 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가의 재난 피해 조사만을 명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조사 결

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원에 산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



與 ‘인터넷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 추진

미디어 TF, 언론개혁 입법 추진...온라인분쟁조정위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노용래 최고위원이 이끄는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형법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고의성이 있

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포털콘텐츠 댓글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댓글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심의 진행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TF 관계자는 “언론 규제가 아닌, 유튜브 등 인터

넷상에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데에 방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블라인드’(열람차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는 원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의 시간·분량을 반영하고,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형법상 ‘출판물(신문·잡지·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을 포함한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것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